

## 독일 통일의 주역들(VII): 학계, 연구계

박상봉 / 독일통일정보연구소(위드) 소장

**학** 일 통일 과정에서 경제·경영 관련 학계와 연구계가 하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둘째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작업에는 어떠한 문제점과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체제 전환 과정을 가능한 한 무리없이 추진해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이 '독일 통일의 주역'이라는 시리즈 속에서 거론할 정도로 효과적이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 문제를 서두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진 독일 통일이 문제점 투성이고 아직도 그 부작용과 어려움 속에서 독일 사회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를 막연히 회피토록 하는 등 통일 대비 작업에 매우 부정적

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상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구 동서독 통일은 근 반세기 동안 대립된 채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국가 규모의 두 사회가 어느 날 갑자기 통합을 이루어낸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체제라고 하는 의미는 국가의 정체성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판이했던 사회를 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의미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당으로 통합되는 것 이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후유증이 예상밖의 부작용을 보일 때마다 “체제를 달리했던 두 집단이 통합된 전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라면 본인은 많은 시행 착오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던 통일 총리 헬무트 콜의 진술한 고백 속에서도 통일의 어려웠던 순간들을 읽어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구 동서독 통일 작업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통일후 구동독 사회의 재건 성과를 구서독이나 다른 선진 국가가 아니라 폴란드, 체코 등과

같은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구 동서독 통일 과정에 있어서 학계와 연구계의 역할은 이들의 작업을 통하여 통일 과정에 추진되었던 정책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경제 활동의 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구 동서독간 통일의 제1과제는 구동독의 낙후한 경제체제를 재정비하여 1,800만 구동독 인구의 풍요로운 삶은 물론이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동독 경제의 참모습은 당시 일반인이 예상하던 상황보다도 더욱 열악한 형편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부유한 나라였던 구동독이었지만 경제 기반 시설은 낙후하였고 열악한 연구 환경에 기업의 경쟁력은 쇠퇴일로였으며 국민들의 생활은 생필품의 만성적인 부족으로 궁핍하였다. 구서독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구동독 경제를 재건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제

환경과 상황에 걸 맞는 경제의 틀을 짜는 작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구서독의 많은 학자와 연구소들이 그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가운데서 마부르크(Marburg)대학교 비교경제체제연구소의 연구 업적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부르크대학교 상경대학 비교경제체제연구소는 소장인 알프레드 쉐러(Alfred Schüller) 교수를 중심으로 한스-귄터 크뤼셀베르크(Hans-Günter Krüsselberg) 교수, 울리히 뢰(Ulrich Fehl) 교수 그리고 헬무트 라이폴드(Helmut Leipold)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 이들의 연구 업적은 구동독 경제 재건 작업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전국의 많은 학자들이 그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이 업적들을 주제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기로 하자.

인적 요소와 제도: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법적 제도, 가격의 자유화, 금융체계의 확립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것은 마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기업인 역할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작업이 가능하였던 것도 사실은 고르바초프 구소련 전 대통령이 중심

이 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대변되는 개혁·개방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동독을 비롯한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이해하는 일이다. 마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는 기업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주의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응을 전제로 한다. 구동독의 체제 전환 작업의 바탕을 마련하였던 경제·사회·화폐 통합도 사실은 1989년 11월 9일 정치적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이 이에 결정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경제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은 체제 전환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일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는 계약 체결의 자유, 상업 활동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권 등이 속한다.

특히, 사유재산제도는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구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체제에 비해 상대적인 비효율성을 보이고 마침

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못하는 체제적 모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바탕 속에서는 효율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 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보다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체제 전환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치는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과도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체제 전환 작업은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날 자금에 대한 공백을 메우는 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은행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기업 규모

이 연구소는 우선 주로 구동독의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시장 경제로 체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와 구조는 어떤 영향력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탁월한 업적을 쌓았다.

사회주의 기업과 협동체의 구조가 바로 체제 전환 과정의 출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조정자로서의 중앙 계획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 구조를 뒷받침해주는 버팀목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질서로의 전환 과정은 그에 해당되는 기업 구조와 그 크기에 대한 조정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떻게 기업이나 협동체의 규모와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기업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설정될 수 없으며, 급작스러운 체제 전환 작업으로 새로운 구조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경제적 힘이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과거 사회주의체제가 남겨둔 부정적인 유산들도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콤비나트는 사회주의체제의 콘체른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체제 전형적인 기업들의 통합으로 부품 업체를 포함한 완성품이 생산되기까지 일련의 공정들을 한 협동체 안에 묶어두는 기업 구조이다. 심지어 한 협동체 안에 기술개발센터, 건설 회사 및 판매 회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경제 분야에 따라 한 협동체 안에 20개에서 40개까지의 기업체가 소속되어 있고 많게는 150여 개의 기업이 한 협동체 안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용자 수도 4만 명에서 7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들이 있다.

그렇다면 계획경제체제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영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효율성이 대기업일수록 높다는 단순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서방 세계의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모방과 회사의 계열화에 따른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 과대 평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평가보다는 기술적 복합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속에서 공정과 공정간 혹은 관련 회사와의 운송 경비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 기술과 기술 그리고 공정과 공정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제적 관점과 평가는 소홀히 취급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대콤비나트를 형성하려는 결정적인 이유는 계획경제체제 자체에서 발견하게 된다. 계획 당국과 콤비나트 지도부와의 원활한 대화와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기업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량으로 두는 것보다 소수의 대기업을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즉, 중앙 계획 당국은 관련 기업들의 수가 제한적이어야 어렵지 않게 이들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서 비교경제학자인 탈하임(Thalheim)은 이러한 관계를 '중앙 계획 경제와 대기업의 유착'(Affinität zwischen Zentralverwaltungswirtschaft und Groß-

betrieben)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기업 규모와 구조가 계획경제체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또 하나의 다른 사고가 있다. 대규모의 회사복합체 소속 회사들간의 업무 분할이 고정될 수 없고 늘 업무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중앙 계획체계의 부족한 실적으로 인해 재료나 생산 요소들의 수급체계가 불안정함에 따라, 기업이나 콤비나트들은 스스로 수리 회사라든가 심지어 부품과 재료 또한 반제품 및 제품까지도 저장해야 할 저장고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자급자족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계획경제체제의 융통성 결핍으로 원료 조달 및 공급체계가 종종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수직적 조직체제로 통합하도록 시도하게 하는 것이다.

콤비나트에 부과되는 임무도 경쟁의 원칙이 배제된 채 미리 결정된 분업의 원칙에 따라 정해져 있다. 시장의 메커니즘 하에서는

수차례 조정되었어야 할 조직이 계획 경제 하에서는 별 의미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구동독의 중앙 계획 경제 하에서 기업 규모와 구조에 영향을 끼쳤던 변수들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조직에 대한 결정 요소들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경제 하에서의 기업 규모와 구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치르는 동안 스스로 형성되어질 뿐 아니라 늘 새로운 환경에 따라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도록 해야 하며, 특히 경제 주체들의 특성과 창의성을 살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장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구동독의 경우 오랜 계획경제체제에 길들여진 기업 규모와 구조로 인해 무엇이 새로운 체제 하에서 '최적의 기업 규모와 구조'인

〈표〉 체제별 기업 구조와 규모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의 구조와 규모가 계획 당국이 만들어놓은 틀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극도로 결핍되어 있음</li> <li>· 기업 활동의 목적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여 사회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li> <li>· 기업의 크기와 구조는 계획 당국의 통제와 조정이 용이하도록 결정되어짐. 계획 당국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중소기업보다는 소수의 대기업 관리가 수월하게 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대형화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은 늘 변화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해야 함</li> <li>· 철저한 경쟁체제 하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길러지고 경쟁력이 갖추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축출됨</li> <li>· 기업 규모와 구조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치르는 동안 스스로 형성되어질 뿐 아니라 늘 새로운 환경에 따라 변화를 추구해야 함</li> </ul>

가에 대해 분명한 해답이 없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서서 기업의 최적 상태를 정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이미 하이엑크가 지적하였듯이 '지식의 교만'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에 체제 전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시장의 힘이라는 메커니즘의 작용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을 규정하는 법적 질서를 갖추는 것이다. 이때 사유 재산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는 법 질서를 충분히 갖추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체제 전환

경제적 틀을 마련하고 이 틀 속에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각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영학적 사고가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후라이부르그대학 기술경제학과 고다우(Godau) 교수, 올덴부르그대학의 경영학 개론과 재무 관리 및 투자 이론에 정통한 페터 베틀게(Peter Betge) 교수 그리고 국제경영컨설팅社인 Roland Berger & Partner社의 베르거(Berger)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 핵심적

인 사항들을 거론하고 있다.

40여 년 동안의 계획 경제 속에서 구동독 경제는 피폐한 상태에 빠져있다. 통일후 구동독 경제는 아무런 과도기와 같은 시간적 여유도 없이 국제경쟁체제로 편입되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는 길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구동독 기업은 물론이고 구서독 기업의 부담도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철저히 분석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안들은 바로 ① 기업의 투자를 위한 입지 조건으로서의 구동독 연구, ② 구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기업들의 임무와 전망, ③ 민영화 문제, ④ 구동독이라는 생산 거점에 대한 경영학적 검토와 요구, ⑤ 구동독 기업의 바른 평가와 자금 관리 등이다.

사회주의체제에 길들여진 잔재들을 청산해내야 한다. 인간들의 행동 양식·인간성·환경들에 부담이 되는 경제로 '미래부담형 생산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통일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성사된 경제·화폐·사회 통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구동독 경제가 발전된 초현대적 구조를 갖춘 지역 경제로 거듭나기 위한 확고한 발판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시장 경제의 도입은 장시간 과묵히 있던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게 된다.

## 민간 투자가 유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시급히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건설 경기의 회복시키고 고용 확대 효과를 높여 체제 전환 초기의 부작용들을 관리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 또한 투자 장애가 되고 있는 구동독내 미해결 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우선권(Vorfahrtsregelung für Investitionen)과 같은 원칙이 제정되어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구동독내 설비 투자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동원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은 경영 환경이 열악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EU와 외국 투자자들의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미해결 재산에 대한 해결은 물론이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인 투자를 피하기 위해 단기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구동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 기업들의 임무와 전망

구동독 기업의 새로운 구조 조정을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점들은 주로 ① 경쟁력 부족, ② 자금 조달 및 가치 평가의 문제, ③ 매니지먼트 미숙, ④ 불충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관계 법령의 불안정 등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이 거론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 조치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 생산과 마케팅, 생산성에 대한 개념 도입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선 생산 컨셉트에 있어서 기업 내부의 경쟁력과 시장 상황을 검토해 미래 생산 프로그램을 정하고 사업 분야와 생산 그룹들을 확정한다. 마케팅 컨셉트에 있어서는 미래의 시장 분석과 관련하여 어느 생산품이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판매될 것인가를 파악한다. 이때 상품, 가격, 판매망, 광고, 서비스 등이 상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성 컨셉트에 있어서도 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하고 비용 절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능한 한 노동 생산성, 단위 자본당 생산성 및 재료별 생산성이 체크되도록 하고 원가 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성이 없는 설비의 퇴출·생산 인프라 개선·물류 개선·생산 공정을 줄이고 저렴한 하청 업체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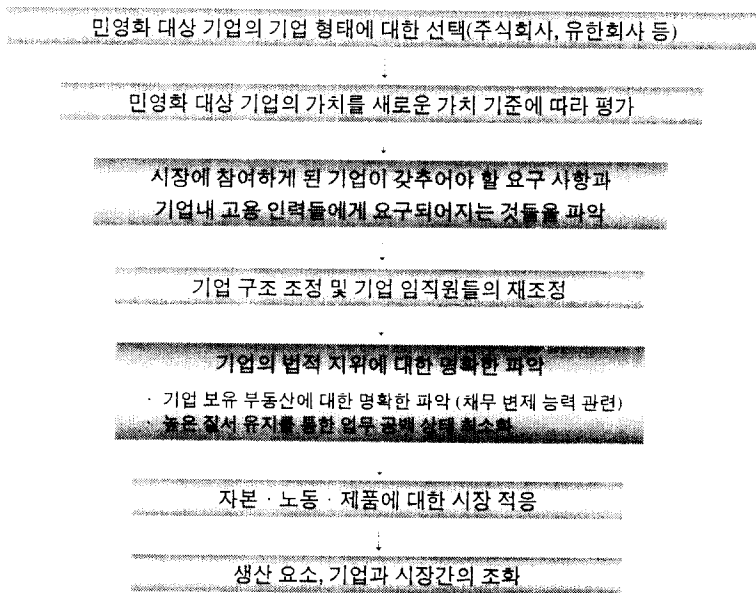
그외에 서구 파트너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구동독의 경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능력을 갖춘 경영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경영자 교육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기업인을 양성하여 현장에 투입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경험있는 전문 경영인을 서방 세계로부터 영입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다. 서방 파트너와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매니지먼트 노하우, 서구 기업과의 연계, 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향후 투자 계획에 서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 민영화 문제

민영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작업에 핵심이다. 이 경우 <그림>과 같은 과정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영화 조치를 통해서 기업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쟁 원리를 인식하게 되고 기업인들은 관할하고 있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습관을 정착시키게 된다. 비로소 기업인이 기업 활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함으로써 보다 책임있는 경영을 하게 될 것이며, 그외 다양한 경영학적 원리들이 적

<그림> 민영화 과정





용될 수 있다.

## 맺음말

지금까지 거론한 것들은 구동독 경제의 재건을 위해 구서독의 주요 학자와 연구소들이 거론하는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경제적 틀을 짜는 작업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은 원활한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유재산제도를 서둘러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그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몰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유 재산을 불허하여 파생된 소위 '더불어 사는 인생' 들의 양산이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기업 활동의 자유·계약 체결의 자유 등을 통한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최적의 경제 활동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사회주의권에서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던 인물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한 사회에서 이러한 정치적 변수는 소홀히 취급될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구동독 경제의 재건 작업이 공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하는 구건물을 헐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안에서 경제 주체들의 새로운 행동 양식이 요구되어진다. 효율적인 투자, 생산성, 원가 절감, 이윤 극대화 등과 같은 개념들이 정착되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 전환 작업은 엄청난 비용과 인내를 요구해야 한다. 많은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며 새로운 체제 하에서 가중되는 책임감과 경쟁 압력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체제 전환 과정에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대적 박탈감과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될 소수의 부유층과 다수 빈곤층의 상대적 괴리는 사회적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작용 속에서도 구동독 사회 전체는 빈곤의 수렁을 벗어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에, 통일을 이루어낸 구서독인들의 자부심과 통일 독일의 비전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統**